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7465 |
|----------|------|

발의연월일 : 2025. 1. 13.

발 의 자 : 김용만 · 이인영 · 강준현
김영배 · 박상혁 · 이훈기
이학영 · 박지혜 · 한민수
노종면 · 용혜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음. 원칙적으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 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괄하는 비재산적 손해까지 포함됨.

그런데 현행법의 문언은 생명·신체에 있어서 손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의 가족 등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비판이 제기됨.

이에 해당 문언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재산적 피해 또는 신체적 외상이 없더라도 독립적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려는 취지임(안 제3조제5항).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사망하거나 신체의 해를 입은”을 “피해자 또는”으로, “배우자, 신체의 해나 그 밖의 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을 “배우자에게는”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과실(過失)의 정도, 생계 상태, 손해배상액 등을”을 “다음 각 호의 사정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과실(過失)의 정도, 생계 상태 및 고통의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
2.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 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
3.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손해배상이 있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정신적 손

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배상기준) ① ~ ④ (생략) | 제3조(배상기준) ① ~ ④ (현행과 같음) |
| ⑤ <u>사망하거나 신체의 해를 입은 피해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직계비속(直系卑屬) 및 배우자, 신체의 해나 그 밖의 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내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과실(過失)의 정도, 생계 상태, 손해배상액 등을 고려하여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u> | ⑤ <u>피해자 또는</u> ----- ----- -----배 <u>우자에게는</u> ----- ----- -----다 <u>음 각 호의 사정을</u> ----- ----- ----- -----. |
| <u><신 설></u> | 1. <u>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과실(過失)의 정도, 생계 상태 및 고통의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u> |
| <u><신 설></u> | 2. <u>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 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u> |
| <u><신 설></u> | 3. <u>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손해배상이 있는 경우 그 손</u> |

| | |
|-------------|-------------------------------|
| ⑥ · ⑦ (생 략) | <u>해배상액</u> ⑥ · ⑦ (현행과 같음) |
|-------------|-------------------------------|